

보도일시 (인터넷,지면) 2023. 8. 17.(목) 12:00 배포 2023. 8. 16.(수) 16:00

시장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높인다

-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발표
-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 민간 금융 조달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 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①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②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③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하여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한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하여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시간 여객선 교통 정보 제공 앱 개발·운영,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 이와 함께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니,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책임자 | 과 장 | 도경식 (044-200-5730) |
| | | 담당자 | 서기관 | 김승룡 (044-200-5731) |

1 추진배경

- 연안교통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자 사회기반시설로써, 정부는 그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정책지원 집중
-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보조항로 운영, 적자항로 유지, 운임 지원 등 ‘비수익’ 항로의 공공성은 강화해왔으나,
 - 관광 중심의 ‘수익’ 항로와 시장성이 ‘불확실한’ 항로에 대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지원정책 부족으로 연안교통시장 전체의 경쟁력은 악화
-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논리를 가미하고, 친환경 등 최근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 포착 및 안전·편의 강화 필요

◆ 민간투자 유입을 통한 시장의 생산성·효율성이 정부의 공공성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전환

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연안여객선 57개사 총 매출액은 3,889억원('21년 기준)으로 버스·철도·항공 등 타 여객운송업에 비해 미미한 시장 규모
 - * 업종별 매출액 : (시내버스) 6.9조, (시외버스) 1.1조, (도시철도) 2.9조, (항공) 3.7조
 - ** 102개 항로 중 운항수지 흑자(수익) 항로 23개, 시장이 기능하지 않아 국가가 운영·지원하는 항로 38개(국가운영 27개, 운항보조 11개), 시장성이 불확실한 항로 41개
 - ‘수익’ 항로와 ‘불확실한’ 항로의 시장성 강화 지원정책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영업손실 지속 증가
 - * 평균 영업손실 : ('18) 0.7억원 → ('19) 4.5억원 → ('20) 5.9억원 → ('21) 7.1억원
- (문제점) 현대화 펀드, 이차보전 등 민간투자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적은 규모, 유인책 부족 등으로 민간금융 참여는 낮은 수준
 - * 외항분야는 2.8조 규모의 선박건조지원 펀드 조성, 내항분야는 1,990억원에 불과
 - 특히, 민간은 연안부문 선박금융 경험 부족,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선가(船價) 변동성 심화 등으로 연안선박을 불안전자산으로 인식
 - 친환경 전환 계획 등 부재로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안전 우려, 낮은 편의성, 높은 운임 등으로 수요창출 매력 부족

정책
방향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 혁신

성 과 목 표

| | 2022년 | 2027년 | 2030년 |
|-------------|-------------------------------|-------|-------|
| ■ 여객선 노후화율 | : 17% → 10% → 8% | | |
| ▶ 민간금융 조달규모 | : 965억원 → 5,000억원 → 6,000억원 | | |
| ▶ 민간펀드 건조선박 | : 0척 → 4척 → 8척 | | |
| ■ 연안교통 소외지역 | : 40개소 → 0개소 → 0개소 | | |
| ■ 연안교통 이용객 | : 1,399만명 → 1,700만명 → 2,000만명 | | |

핵심전략

추진 과제

1

연안교통
시장활력 제고

- ▶ 민간금융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 국가보조항로 전면 개편
- ▶ 시장의 자율성·재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시장 지속가능성 제고

2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 ▶ 전 국민 연안교통 안전 정착
- ▶ 대국민 여객 편의성 향상
- ▶ 섬 관광 접근성 향상
- ▶ 관광콘텐츠 개발 등 여객수요 창출

3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 ▶ 섬 주민 민생안정 강화
- ▶ 연안교통 관리기반 마련

1. 연안교통 시장 활력 제고

- (민간금융 활용 촉진) 민간금융의 연안교통 시장 유입 확대(‘30년까지 6,000억원, 37척 현대화)를 위해 펀드 확대,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금융지원 강화) 현대화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하여 선박 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
 - * 연안선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①신용보증 지원조건 완화, ②대출이자 지원 병행
 -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 중소선사-중소조선소 컨소시엄*을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중소조선소 RG(지급보증) 요구조건 완화 등 펀셋 지원
 - *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운조합(중소선사), 한국해양진흥공사(정책금융), 한국중소조선 공업협동조합(중소조선사)로 구성된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운영
- (국가보조항로 전면 개편)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보조하는 항로에 시장 논리와 효율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 (민간 선박투자)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15년~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 운용*
 - * 공공운항사 이외 민간운항사 진입을 위해 운영상 인센티브 등 마련
 - (운영 효율화) 민간이 보조항로 직접운영 희망 시 ①선박건조 보증, ②한시적 결손금 지원, ③운영자금 대출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 수요없는 항로는 위탁기관 전환(민간→공공)하여 운영 효율화* 도모
 - * 현재 국고여객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간 위탁되어 선박 유지관리 수준이 낮아 조기 폐선(평균 17.3년)이 많고, 폐선시 잔존가치가 낮음(일반 여객선의 41%수준)
- (시장 자율성·재생력 강화) 연안교통 시장이 자율성·재생력을 갖추기 위한 인증제 마련,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 (상생여객 인증) 高수익 항로와 低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하는 선사에 대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센티브* 등 지원 추진
 - * 수익항로 신규 공모 가점, 현대화펀드 지원비율 우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등

- (세제 지원 등) 노후 연안여객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취득세 감면(1~2%p) 지원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3.下)
 - 친환경 선박 녹색금융* 금리혜택(0.9~3.4%), 이차보전 우대(0.5%p) 지원
 - * 친환경선박 건조·운송을 포함하여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 (첨단기술 도입) 친환경·스마트화 등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 교통 수단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민간투자 유도
 - (탄소중립) 친환경연료 여객선 R&D*를 확대하고, 실증이 완료된 친환경선박**을 국가보조항로(테스트베드)에 단계적 투입
 - * 선종별(일반선, 쾌속선, 카페리 등) 적정 친환경 추진시스템 도출 및 표준모델 개발
 - ** ('24) 전기추진차도선 시운전 → ('25) 목포권 항로 시범운영 → ('26) 국가보조항로 투입
 - (스마트화) 지능형 항해 및 기관자동화 시스템 등 연안여객선에 차용가능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로 해양사고 예방·규제 간소화
 - * 지능형 항해시스템 도입으로 고령 선장·선원의 인적과실 방지, 기관자동정비기술 개발로 법정 고속기관 개방검사 주기 연장 등 개선 추진

2.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 (연안교통 안전 정착) 안전시설 보강, 선사의 안전투자 유도 및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 불식
 - (안전 보강)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접안시설 보강, 주차대기부지 확대 등 안전 인프라 단계적 확충
 - * 국가어항 내 여객선 선착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전수조사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난간, 안전표지판 등 추가 설치('23~)
 - (전주기 안전관리)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부터 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권역별 안전 TF 구성·합동점검('23)
 - (알권리 강화) 노후선 교체·선박 유지관리 등 여객선사 안전투자내역 공시, 선박 안전검사 결과 공개 등 국민의 안전분야 알권리 강화
 - * 안전분야 국민 참여 강화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 및 각종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대국민 연안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 운영 검토 추진('24)

- (여객 편의성 향상) 육상대중교통 수준의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비선 확보,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승선절차 간소화 등 지원 추진
 - (예비선 추가 확보) 민간선사 휴·폐업 등에도 단절없는 연안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여객선 예비선박 추가 확보 추진
 - * 현 예비선(1척) 운항실적은 273일이며, 국고여객선 예상 휴항일수(738일) 및 민간선사 휴항일수 등 고려 시 예비선 보유대수 확대 필요
 - ** 국고여객선 펀드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보 추진
 - (모바일 서비스 강화) 모바일 접근성과 활용도 개선을 위해 예매 시스템 고도화 및 대중화된 모바일 플랫폼(네이버* 등)과 연계 추진
 - * 네이버지도 앱에서 섬 여행지 검색 시 여객선 항로 안내 및 여객선 예매 누리집 연결
- (접근성 향상) 대규모 관광객 유치·개발을 위한 대형 여객부두 개발, 여객선 환승할인체계 구축, 라스트마일* 지원 등 접근성 향상
 - * 육상대중교통거점(공항, 기차역 등)과 여객선터미널 간 연계를 위해 전용버스 등 지원
- (여객수요 창출) 섬 기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여객선이 단순 이동수단에서 탈피하여 체험·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테마 발굴
 - * ①섬 순례길 투어, ②백령도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③경남 고성 자란도 해양치유센터('22~'26), ④완도 해양치유센터('19~'23) 및 청산도 해양치유공원('20~'23) 등
 - ** 여객선 내 항로별 특색있는 체험공간 조성, 노을관광·선상인문학강좌 등 여객 콘텐츠 발굴

3.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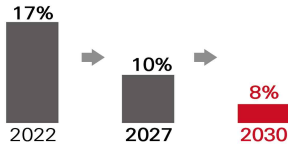
- (섬 주민 민생안정) 섬 주민 생활물류비*(택배비) 경감, 섬 주민 운임지원 및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제로화 등 대중교통 역할 강화
 - * 여객선 등을 통한 배송으로 내륙지역 대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해 배송수요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 대상, 예산범위 내 한시 지원
- (관리기반 마련) 연안교통수단 및 시설 등 연안교통체계의 통합 관리를 위해 (가칭)연안교통기본법 제정
 - * 주요 내용(예시) : 기본계획 수립, 연안교통 이용촉진 및 지원, 교통수단·시설 투자 개발, 국가보조항로 위탁운영, 실태조사, 안전관리 등 지원근거 신설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혁신하겠습니다.

성과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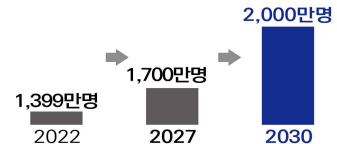
여객선 노후화율 **Down** ↓



연안교통 소외지역 **Zero** !



연안교통 이용객 **UP** ↑



이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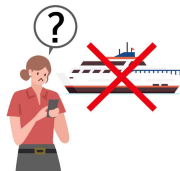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보조



중소선사에게는
넘기 힘든
대출의 문턱



실시간으로
알 수 없는
여객선 운항정보



섬 지역에
부과되는 추가
택배비 부담



이렇게 바꿉니다!

선박은 민간이
짓고, 국가가
용선계약

* 국고여객선 전용 펀드 출시



해양진흥공사
직접 투자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확인



섬 추가 배송비
환급 지원 추진

* '23년 추석기간
시범사업 운영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연안교통 시장활력 제고

민간금융 시장 유입 확대



-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확대를 통해 민간금융의 연안교통 시장 유입 확대

국고여객선 펀드 출시



- 공모형 선박펀드로 선박 조달
- 국가는 장기(15-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운영
- * 일반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투자 수요처를 제공, 국가는 양질의 선박을 조기에 조달

항로운영 효율화



- 민간의 수요가 있는 경우 선박건조 보증, 리스크 관리 등 인센티브 제공 ▶ 단계적 민영화 추진
- * 수요가 없는 항로는 공공기관에서 관리, 지속 민영화 전환 추진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연안교통 안전 정착



- 여객선 안전시설 보강 강화
- 선박 안전검사 결과 공개 등 알권리 강화

여객 편의성 향상



- 여객선 운항정보 실시간 제공 앱 개발
- 네이버 등과 여객선 예매서비스 연계
- 바이오정보 스캔으로 승선절차 간소화

섬 관광을 위한 접근성 향상



- 대규모 관광객 유치 개발을 위한 대형여객부두 개발
- 섬 기반 관광콘텐츠 개발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섬 택배비 지원



- 육지 대비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경감 지원
- * '23년 추석기간 시범 지원

소외도서 교통서비스 지원



-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지역 제로화
-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전용선박 확보 및 운항·안전관리 수준 향상

연안교통 관리기반 마련



- 연안교통체계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 연안교통기본법 제정